

회고

자유 언론을 향한 만나면 길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가 걸어온 발자취

신홍범 _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

기자들의 제작 거부 농성 투쟁

1975년 3월 6일 오후 2시부터 조선일보 기자들은 편집국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제작 거부 농성에 들어갔다. 취재와 기사 작성, 편집 등 일체의 신문제작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이다. 취재와 보도를 가장 중요한 직업적 사명으로 여기던 기자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조선일보가 마침내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포기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언론사라면 마땅히 ‘사실’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언론의 이런 기본적 책무를 포기해 왔다.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큰 사건’을 ‘작은 사건’으로, ‘진실’을 비틀어 ‘거짓’으로 만드는 것을 다반사로 해오고 있었다.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종교계의, 그리고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해 온 것이 그 대표적인

에다. 이런 사건들은 보도되어도 아주 작게 밖에 다루어지지 못했는데, 나중엔 그나마 1단 기사로도 보도되지 못했다.

신문을 포함한 모든 언론은 기자들을 비롯한 언론 종사자들의 ‘양심’과 ‘양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작되어야 하는 것이 세계 언론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건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신문들은 권력에 의해 신문의 지면이 결정되는 참담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

조선일보 기자들의 제작 거부 농성은 이런 언론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1972년의 유신 체제 이후 권력과 언론이 본격적으로 유착되던 시기에 언론을 구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쫓기던 운동이었다.

1975년 2월 13일 조선일보 사장 방우영은 조선일보를 ‘정론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권력이 요구하는 모든 금기 사항을 떨쳐 버리고 신문을 올바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조선일보에서 쓰지 못할 금기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조선일보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를 기자들에게도 주지시키라고 지시했다. 조선일보를 바른 신문으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쳐 오던 기자들은 이를 열렬히 환영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사장의 이런 약속은 며칠도 안 되어 거짓임이 드러났다. 보도해야 할 중요한 기사들이 금기사항에 걸려 보도되지 못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민청학련 학생들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폭로한 사실도, 인권 회복을 위한 각종 종교, 사회단체들의 모임과 주장도 빠지기 일쑤였다.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해 써낸 기사 머리엔 누군가가 ‘이 기사는 보고 참고만 하시오’라든가 ‘이 기사는 문제성 있는 기사이니 요령껏 처리하시오’라는 처리 방침이 적혀 있어 자취 없이 사라지곤 했다. 반대로 권력에 유리해 보이는 사건은 기자가 기사 거리가 안 된다고 판단해 기사를 쓰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에 의해 기사로 만들어져 실리곤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기자들은 언론 자유 수호 운동을 이끌어가기 위해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 기자협회 조선일보 분회(약칭 ‘조일분회’)를 재건했는데, 회사 측은 이 분회의 활동마저 지속적으로 탄압했다. 기자들이 의사소통과 단결을 위해 「조일분회소식」을 발행하자 발행 중지를 ‘지시’했으며, 이를 듣지 않고 소식지 2호를 발행하자 분회장 정태기 기자를 파면(징벌적 의미에서 해고), 김유원, 성한표, 심채진, 최병선 등 분회 임원 4명을 견책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이 징계는 기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징계 유예 상태로 두었다).

1974년 말 파면했던 두 기자 백기범, 신흥범(이 글의 필자)을 이 해 3월 5일 창간기념일까지 복직시키겠다는 약속도 파기해 버렸다. 1974년 12월 18일 두 기자는 유신 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유정희 국회의원 전제구의 글이 조선일보에 실린 것을 두고 편집국장에게 항의했다가 파면당한 바 있었다. 유신 체제 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쟁점이 되어 있는 시기에 이 독재 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글을 실은 것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할 언론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항의한 것을 문

1975년 3월 9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수호를 위한 제작 거부 농성 투쟁 100시간을 맞아 투쟁의 결의를 다지면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 파면당한 1차 집행부 사진은 여기에 없다.



자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료집 『자유언론, 내릴 수 없는 깃발』

제 삼은 것이다. 편집국장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하극상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 부당함을 참을 수 없었던 기자들이 철야 농성을 하면서 복직을 요구하자 다급했던 회사 측은 편집국장단을 내세워 복직을 약속했으나 날짜가 다가오자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파기해 버렸다.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갈 길은 제작 거부 농성밖에 없다고 기자들은 판단했다. 농성 첫날, 기자들은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이후 4개월이 지난 오늘 조선일보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실에 투철해야 하는 기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언론 자유에 도전하는 외부 권력과 투쟁하고 언론 내부의 안이한 패배주의와도 감연히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결의문에서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기자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두 기자의 부당해

고를 철회하고, 기자들의 자유 언론 실천 노력을 외면한 편집국장을 비롯한 편집국장단이 인책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들의 이런 제작 거부 농성에 회사 측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신문사의 사주나 편집국 간부들이 언론인으로서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다면 언론의 생명이라 할 언론의 자유를 되찾으려는 기자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함께 싸우는 것이 어렵다면 정신적으로라도 지원하고, 투쟁하는 기자들을 권력이 박해하면 어떻게든 그들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주 방우영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리고 편집국의 부·차장들 또한 비겁하게도 기자들이 아닌 사주의 편에 서서 통신사와 다른 신문의 뉴스를 베껴 신문을 만들었다.

파면, 그리고 또 파면

기자들의 제작 거부 투쟁이 계속되자 회사 측은 기자들의 ‘목을 자르는 것’으로 대응했다. 분회장 정태기(조사부), 부분회장 김유원(외신부), 보도자유부장 성한표(정치부), 권익옹호부장 심채진(편집부), 총무부장 최병선(외신부) 기자 등 조선일보 분회의 집행부 5명을 전격 파면(해고)한다고 공고했다. 기자들은 즉시 예비했던 5명의 제1차 임시집행부를 구성하고 농성을 계속했다. 회사 측은 3월 7일 시내관에 기자들을 새로 모집한다는 사고를 내보냈다.

기자들의 이런 투쟁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협회, 한국일보, 국제신보 분

회, 기자협회 경기도 지부 등 전국의 언론계로부터 격려 전문과 성금이 답지했다. 조선일보가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들을 파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함석헌, 윤보선, 장준하 등 재야 원로들로 구성된 민주회복국민회의가 3월 7일 기자들을 지지하고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기자들이 밝힌 입장과 결의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면서 조선일보의 경영주가 자유 언론을 부르짖는 기자들을 대거 파면 조치한 것에 대해 유감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경영주가 앞으로도 더 파면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은 자유 언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이는 한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부인하는 처사로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도 조선일보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해직시킨 기자들을 즉각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조선일보 사태를 전국 언론계에 보도하기 위해 「기자협회보」를 긴급 증면해 발행했는데, 바로 이것을 이유로 문공부는 이 주간지를 폐간시키고 말았다.

농성 3일째인 3월 8일엔 구속자가족협의회와 수도권 선교자유위원회가 격려 성명을 발표했으며, 한국기독교여성연합회는 조선일보를 규탄하면서 기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해직시킨 기자들을 원상회복시키지 않으면 조선일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회복국민회의 대변인 함세웅 신부는 수위의 제지를 뚫고 농성 현장을 방문해 기자들을 격려하여 큰 감동을 주었다. 새문안교회 등 7개 교회의 학생들 50여 명이 편집국에서 기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지려다 제지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조선일보의 폭거를 비난하는 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조선일보는 계속 칼을 휘둘러 농성 5일째인 10일엔 1차 임시집행부의 간부 박세원, 임희순 기자 등 5명과 박범진, 유장홍, 최장학 기자 등 3명을 파면시켰다. 농성 6일째 되는 11일엔 부·차장급 기자로서는 처음으로 정치부의 이종구 차장이 농성에 합류하는 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어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해임된 기자 12명이 복직돼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한 다면서 “신문제작에 참여했다는 논공에 따라 호혜적인 처우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언하고 농성에 참여했다. 그의 농성 합류는 당시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던 위치에서 박정희 정권의 보복을 각오하고 내린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마침내 농성장에서 끌려나오다

단 하루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6일 동안 편집국 농성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싸운 3월 11일, 기자들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 결의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전화선이 끊기고, 정문엔 바리케이드가 쳐지고 수십 명으로 급히 증원된 낮선 경비원들이 편집국을 봉쇄한 가운데 기자들은 싸우고 있었다. 파면당하지 않은, 남은 기자들은 파면당할 것이 분명한, 잘려나간 집행부의 뒷자리에 저마다 먼저 참여하려고 다투기도 했다. 농성장 벽에 길게 걸린 해임 동료 명단에서 영광스러운 앞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다투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직 남은 동료 기자들

1975년 3월 11일 제작 거부 농성 투쟁을 하던 조선일보 기자들이 강제로 끌려나온 후 신문사 앞에서 회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자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료집 『자유언론, 내릴 수 없는 깃발』

의 부인들마저 번갈아 회동하며,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하는 말을 잇달아 보내오고 있었다. 먼저 해임된 기자의 부인이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상상도 못할 눈물겨운 사태가 신문사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농성 6일째 되던 날 조선일보사는 기자 4명을 또다시 과면하고 37명을 무기 정직시켜 버렸다. 이로써 기자들은 53명의 동료들을 잃은 채 농성을

이어갔다. 40여 명의 기자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옥쇄(玉碎)’하기로 다짐하고 있던 11일 밤 7시 30분,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많은 경비원들이 편집국으로 몰려 들어와 기자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이것이 6일 동안 계속된 농성 투쟁의 끝이었다. 쫓겨난 기자들은 12일 오전 회사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다. 조선일보는 3월 14일 신문 지면을 통해 민주회복국민회의 등 사회단체들이 기자들을 지지한 성명에 대해 이성을 잃은 폭언을 퍼부었으며, 농성장을 찾아 기자들을 격려한 함세웅 신부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이제 해직당한 기자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언론 자유를 되찾고 민주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언론사 밖에서 ‘거리의 언론인’으로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75년 3월 21일 출범시킨 단체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였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의 탄생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기자들은 제일 먼저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다. 그리고 그 후 동아일보 지면은 조금씩 달라졌다. 학생들의 시위 기사가 거의 매일 실렸는데, ‘1단의 벽’을 깨뜨린 경우도 있었다. 유신정권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12월 중순경부터 동아일보의 광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무더기 해약 사태가 일어났다. 권력의 개입과 압력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유신정권의 광고 탄압은 기자들의 자유 언론 실천 의지를 꺾지 못했다. 기자들은 긴급 총회를 열어 광고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광고 지면이 백지로 나가 광고 탄압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분노한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격려 광고가 쏟아졌다. 그러나 동아일보 사주와 간부들은 기자들의 결의와 국민들의 성원을 저버리고 유신정권에 굴복하고 말았다. 3월 8일 경영 악화에 따른 기구 축소 등을 이유로 들어 기자 18명을 해고했다. 기자들이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자 회사 측은 17명의 기자들을 또다시 해고했다. 무더기 해고의 위협 속에서도 기자들은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했고, 13일 아침부터는 23명의 기자들이 공무국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17일 새벽 3시경 회사 측은 꺾패와 '구사대' 200여 명을 농성장애 난입시켜 기자들을 폭력으로 몰아냈다. 4월 11일까지 해직 또는 무기 정직을 받은 기자 및 방송인 들은 모두 131명에 이르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회사로 돌아갔지만 대부분은 '거리의 언론인'으로 남았다. 남은 113명의 기자들이 만든 단체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였다.

이 동아투위와 조선투위는 같은 시기에 같은 이유로 언론사에서 쫓겨나 고락을 함께하며 자유 언론을 향한 먼나먼 길을 함께 걸어갔다. 초기엔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했으나 1977년부터는 함께 연대하여 공동으로 성명서도 발표하고 행사도 자주 함께 했다.

조선투위와 동아투위 기자들의 이런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은 권력의 일시적인 언론 통제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저항운동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계속된 언론 탄압이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해 폭발해 버린 것이었다. 그 역사를 살펴보지 않고는 기자들의 투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 통제의 시작

한국의 언론은 일제의 압제를 벗어난 후에도 종종 시련을 겪어왔다. 대부분 권력이 문제였다. 자유당 정권 말기인 1959년 봄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이 폐간된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도 집권 초기부터 언론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져들었다.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학생 데모가 고조되었던 1964년 여름의 계엄 사태 이후 언론을 규제하려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하려 했던 것이 그 한 예다. 신문사의 발행인, 편집인, 기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강력하게 반대하자 (이를 계기로 한국기자협회가 탄생했다) 법 공포를 미루는 식으로 시행을 보류했다.

언론윤리위법 파동은 한국 언론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이루었다. 표면 상으로는 언론과 정부 간의 갈등이 타협에 의해 해소된 것처럼 보였으나, 이를 분기점으로 언론은 점점 권력의 음성적인 통제에 예속돼 갔다. 1967년 5월 제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몇 달 전부터 언론사엔 중앙정보부원이 신문사 편집국에 상주하다시피 드나들면서 노골적으로 신문 제작에 간섭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언론 통제엔 몇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그 하나가 테러였다. 언론인들에 대한 여러 테러 사건은 정치 문제가 되어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로까지 이어졌으나 진상이 규명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언론 통제에 동원된 또 하나의 방법은 과열되기 시작한 언론사 간의 상업주의적 경쟁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언론 기업은

중앙일보의 창간과 더불어 치열한 상업주의적 경쟁 속에 빠져들어 언론의 공익성보다 기업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리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가 시작되어 일본 자본을 비롯한 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경제개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뒤엔 언론과 권력 간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언론사의 본격적인 시설 근대화와 기업화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 자금이 권력에 의해 특혜처럼 주어짐으로써 권력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고삐를 쥐게 되었다. 조선일보사에 대한 상업차관 제공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400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조선일보에 제공했다. 이 금액은 당시로서는 매우 큰돈이었다. 한일협정에 따른 대일청구권 자금과 함께 연차적으로 일본에서 들여온 것으로, 그 조건이 특혜나 다름없었다. 당시 시중금리는 연리 26%였는데 조선일보에 적용된 것은 7%밖에 되지 않았다. 이 차관을 계기로 조선일보와 박정희 권력은 밀착해 갔다.

언론사가 이처럼 기업화됨에 따라 언론 기업은 크게 성장했다. 1960년대의 10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10%였는데 비해 언론사의 양적 성장은 20%로 나타나 있다. 신문 발행부수에서도 1961년에는 97만 부였던 것이 1966년엔 280만 부로 늘어났으며, 편집국 기자들의 수도 1964년엔 1,595명이었던 것이 1971년엔 3,399명으로 약 2배 이상 늘어났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권력의 탄압과 음모는 갈수록 강화되었다.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을 계기로 많은 언론사가 박정희 정권에 굴복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만이 그나마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경향신

문은 탄압을 받아 경매 처분되었고, 조선일보는 상업차관을 받은 이후 권력과 유착을 강화해 나갔다. 동아일보만이 권력의 장애물로 남아 있었으나, 이 신문마저 1968년 ‘신동아 사건’으로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

1969년에 접어들면서 정국은 3선 개헌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 상황에 이르렀으나 언론은 개헌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논조를 떠나갔다. 이렇게 언론이 박정희 정권과 밀착해 가는 과정에서 언론에 대해 큰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등 3개 시장에서 일하는 7,600여 명의 노동자들의 비참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외치면서 자기 몸을 불사른 전태일 분신자결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인데도 언론은 이를 아주 작게 다루었을 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1971년 3월 26일 서울대 문리대, 법대, 상대 학생 50여 명이 동아일보사 앞에 몰려와 언론의 타락을 규탄하는 언론 화형식을 가졌다. 이들은 ‘언론인에게 보내는 경고장’에서 “나오라, 사이비 언론인들이여 나오라. 이 민주의 광장으로 나와 국민과 선배에게 사죄하라. … 사이비 언론 뒤에 도사린 정보원이란 이름의 제6적이어 나오라. 민주 정신의 혈액을 빨아먹는 흡혈귀여! 안타깝다. 그 자리, 그 건물이건만 민주 투사는 간 곳 없고 잡귀만 들끓는가. 사자의 위용은 어디가고 도적 앞에 꼬리 흔드는 강아지가 되었는데가”라고 기자들을 비판하고 조롱했다.

박정희 3선의 길을 열어준 1971년 4월 27일의 선거에서 박정희가 승리하자 조선일보는 “아낌없는 축하를 보낸다. 4년간의 집정 공약을 다짐한 끝에 얻어낸 승리의 영광이란 데서 더욱 보람 있는 순간의 감격은 값있는

것”이라고 축하를 보냈다.

유신체제의 출현

학생들의 이런 비판은 종교계, 학계, 문화계의 언론 질타로 이어졌다. 언론에 대한 이런 공격은 기자들의 양심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으며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각성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1971년 4월 17일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수호선언’을 시작으로 언론자유수호선언 운동이 전국 언론계에 번져나가게 되었다. 조선일보 기자들도 71년 4월 17일 언론자유수호선언문을 발표하고 수사 및 정보기관의 사내 출입과 간섭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원은 변함없이 편집국을 드나들었으며, 조선일보사의 보도 태도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이른바 ‘유신체제’로 알려진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을 모두 정지시켜 버렸다. 헌법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서 수행하도록 했으며,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른바 유신 체제를 선포한 것인데, 박정희 개인의 종신 집권을 위한 헌정 쿠데타였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한 이런 폭거에 대해 언론은 어떻게 반응했던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가장 알맞은 시기에 가장 알맞은 조치로서 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으며, “비상사태는 민주제도의 향상과 발전을 위한 하나의 탈각이요 시련이요 진보의 표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다”고 지지를 보냈다.

‘유신헌법’을 채택하기 위해 10월 2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확정 공포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은 반대할 수 있는 언론 자유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일방적으로 개헌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10월 27일 개헌안이 공고된 뒤 11월 21일 국민투표가 실시되기까지 신문의 많은 지면은 당국이 배급한 새 헌법안에 대한 해설기사와 할당된 연사들의 출연으로 메워졌다. 죽음과 같은 공포가 짓누르는 가운데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11월 23일 이른바 ‘유신헌법’이 확정되었다. 유신 체제가 시작된 뒤 한동안 위축당해 있던 각계의 지식인들은 대학가에서 먼저 터져 나온 민주화투쟁에 발맞추어 ‘유신헌법 철폐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지식인, 종교인들의 행동은 보도되지 못했다. 노동자들의 인권유린과 고통당하는 민중의 삶도 묵살되었다. 중앙정보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편집국에 거의 상주하다시피하면서 언론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기사를 빼라, 넣어라, 줄여라, 키워라 하고 요구하면서 그들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사건을 만들고 수사기관에 연행하여 공포 분위기 속에서 협박하고 구타했다. 기자들은 질식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와 무력감 속에서 신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범죄적인 신문 제작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이 또다시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1973년 10월 7일 동아일보의 젊은 기자 50여 명이 잘못된 신문제작 태도에 항의하는 철야 농성을 편집국 안에서 벌였다. 그들은 밤을 새우면서 보도해야 할 기사가 누락될 경우엔 다시 철야 농성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후 기사 누락, 철야 농성이 여러 날 되풀이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1973년 11월 20일 경부터 각 사별로 기자들이 잇달아 두 번째로 언론 자유 수호 결의대회를 갖게 되었다. 조선일보 기자들도 11월 27일 언론 자유 수호 결의대회를 갖고 “우리는 계속되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의해 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부끄러워하며, 보도할 가치가 있는 모든 기사를 보도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선언에도 불구하고 신문 제작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어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들에 대한 제명, 징계 등에 관한 당국의 발표만이 한결같이 보도될 뿐이었다.

그러나 독재정권의 탄압이 강화될수록 국민들의 행동도 더욱더 격렬해져서 유신 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저항운동, 즉 개헌 청원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이 확대되고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고양되자 박정희 정권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 2호를 선포했다. 긴급조치의 발동으로 언론은 더욱 위축당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되자 언론의 최소한의 활동도 철저히 봉쇄당했다. 수많은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들과 학생들이 잡혀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사형,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으나, 언론은 당국이 발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쓸 수 없었다. 한국 사회는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 들었다.

10·24 자유 언론 실천 선언

군법회의 재판정에서는 양심수들이 보복을 각오하고 수사 과정에서 당한 무자비한 고문과 비인간적 만행을 고발했지만 신문과 방송은 이에 대해 한 마디의 보도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1974년 10월 19일 각 신문사 편집국장과 방송국장을 소집하여 데모, 휴강, 개강 등 학원 내의 움직임을 일체 보도하지 말고, 종교계의 민권운동을 보도하지 말 것 등 4개항의 이른바 ‘협조 요청’을 강요했다. 그러잖아도 긴급조치 등으로 위축될 대로 위축된 언론에게 이런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아예 관보(官報)와 관제 방송이 되라는 것과 다름없었다.

지난 몇 해 동안 펼쳐왔던 언론자유운동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기자들은 다시 조직을 정비하여 언론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자유언론운동을 조금이라도 실현시키려면 무엇보다 조직된 힘, 단합된 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조직된 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1974년 3월 6일 결성된 것이 동아일보 언론노동조합이었고, 1974년 12월 10일 결성된 한국일보 노동조합이었다. 그러나 노조 활동은 정부와 회사의 탄압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그래서 기자들은 노조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기자협회 분회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를 느꼈다. 두 조직이 함께 움직이면 그만큼 더 힘이 생길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동을 전 언론계 차원에서 전개하려면 전국적인 기자들의 단체인 기자협회를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자협회 재조직에 나서 언론자유 투쟁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기자들로 회장단을 구성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기자협회 조선일보 분회’를 재조직하여 새로 만든 것도 바로 이런 운동의 ‘구심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런 때에 언론사의 간부들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태는 여러 신문사 기자들로 하여금 또다시 언론 자유 수호 선언에 나서게 했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1974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기자들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편집국에서 ‘자유 언론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 기자들은 선언문에서 어떤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배제할 것이며, 기자와 신문사의 간부가 부당하게 연행되거나 구금될 때는 총력을 모아 규탄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 선언했다. 최근 사태에 대한 학생, 종교인 등 각계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반드시 보도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실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날의 행동엔 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 바로 이날의 결의 내용을 조선일보 지면에 보도하라고 요구하면서 철야 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전에는 선언대회를 했어도 그 내용을 보도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 기자들이 이런 요구를 한 것은 한국의 언론 상황이 어디에까지 와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려 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기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피할 수 없었는지 이를 시내판에 3단 뉴스로 보도했다. 이 10·24 자유 언론 실천 운동은 25일 전국으로 번져나가 전 언론사가 거의 망라된 35개 사로 늘어났다.

조선일보 자유언론실천대책회의

기자들의 이런 뜨거운 실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보도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었다. 꼭 들어가야 할 기사가 빠지거나 큰 뉴스들이 고작 사회면 1단으로 깔려 버리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기자들은 이를 ‘1단 벽’이라고 불렀다.

조선일보의 사장 방우영은 조선일보의 보도 방침을 밝히면서 “조선일보 보는 동아일보의 뒤만 따라가면 된다”고 말하곤 했다. 동아일보를 앞질러 보도하면 위험할지도 모르니 적당히 눈치를 보아 뒤쫓아 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침도 오래 가지 못했다. 이마저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편집국 간부들은 사장의 이런 말을 따라 당국이 전화나 ‘협조요청’을 해오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기사를 난도질했다. 기자가 성의를 다해 기사를 쓰면 부장, 국장을 거치는 동안 중요 내용이 삭제되었다. 편집기자가 기사 내용에 맞게 제목을 달면 차장, 부장, 국장, 편집 이사를 거치는 동안 이해하기 힘든 알쏭달쏭한 제목으로 바뀌었다.

중요한 기사가 1단 기사로도 실리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기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각 부 대표 2명으로 구성된 ‘자유언론실천대책회의’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사는 대책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통고해 왔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1974년 12월 18일의 두 기자(백기범, 신흥범) 파면이었다.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조선일보 기자들의 절망적인 노력은 마침내 1975년 3월 6일부터 6일 동안에 걸친 치열한 제작 거부 농성 투쟁으로 폭발했고, 기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은 조선일보사가 이들을 무참하게 대량 해직시키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학살’이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언론의 생명이라 할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기자들을 언론사가 스스로 언론 현장에서 추방해 버린 자기 부정과 자기모순의 극치였다. 같은 시기에 동아일보에서도 언론 자유 수호 투쟁으로 113명의 기자와 방송인들이 해직되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있는 뒤 오랜 동안 언론 자유 수호 운동과 저항운동은 사라져버렸고, 한국의 언론은 마침내 ‘제도 언론’ 시대로 들어갔다. 언론이 권력에 완전히 굴복하고 권력과 야합하여 독재 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편입돼 버린 것이다. 언론은 독재 권력의 일부가 되어 그 권력을 함께 누렸고, 한국 사회는 오랜 동안 ‘언론 부재 시대’, 캄캄한 어둠이 지배하는 ‘언론 암흑 시대’를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의 출범

쫓겨나온 기자들이 3월 21일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한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기자들을 계속 파면시켰다. 4월 4일엔 또다시 김선주, 김영용, 문창석, 서창모 오성호, 황헌식 기자 등 18명을 파면하여 해직된 기자가 34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그 뒤 회사에 복귀하여 32명의 해직기자들이 끝까지 남아 조선투위의 깃발을 함께 들고 싸웠다. 32명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김선주, 김영용, 김유원, 김재문, 김종원, 김태호, 마상원, 문창석, 박범진,

박세원, 박한식, 백기범, 서창모, 성한표, 신현국, 신흥범, 심채진, 안성암, 오성호, 유장홍, 이종구, 이주혁, 이창화, 임희순, 정재우, 정준, 정태기, 주영우, 최병선, 최병진, 최장학, 황헌식

조선일보는 그들이 회사 밖으로 쫓아낸 60여 명의 기자들을 찾아다니며 부·차장들을 총동원해 회사에 복귀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계속했다. 부·차장들만으로 계속 남의 신문을 베껴 신문을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귀하지 않는 기자들을 계속 협박했다. 정보기관을 방블케 하는 수법으로 총무부 및 관리부 직원들을 동원하여 기자들을 미행하고 감시했다. 쫓겨난 기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여관, 기자협회 등에 승용차를 가져다 놓고 차 안에서 체크했다. 기자들이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자유 언론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할 때는 그곳까지 따라와 명단을 작성했다. 기자들은 기자협회에서 총회를 갖고는 했는데, 이런 때는 맞은편 코리아나 호텔에서 망원렌즈를 가져다가 동정을 살피기도 했다. 편집국의 일부 차장들로 첩보조직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는 것도 나중에 드러났다.

조선일보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정잡배 수준의 비열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1975년 4월 10일 폭력배들을 동원, 기자들이 연락처로 쓰고 있던 여관에 침입하여 흥기로 협박했다. ‘밤 10시 30분 아라이’라는 별명을 가진 폭력배 박 모를 경비감독부장으로 고용한 뒤 이들을 동원해 행패를 부리게 했다. 그들은 기자들이 숙직하고 있던 경성여관에 구두를 신은 채 방으로 들어와 “기어코 피를 보아야 하겠느냐. 나는 해방 후 사람도 많이 죽였고 테러도 많이 해봤다. 너희들을 죽이고 나 죽으면 그

만이다”라고 폭언을 퍼부은 후 책상 위에 있던 가위를 잡고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벽을 찍어 보았다. 기자들은 이들을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폭력배들은 기자들이 있는 음식집에까지 쳐들어와 기물을 때려 부수고 기자들을 폭행하며 골목길로 끌어들여 10여 차례 길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초기의 조선투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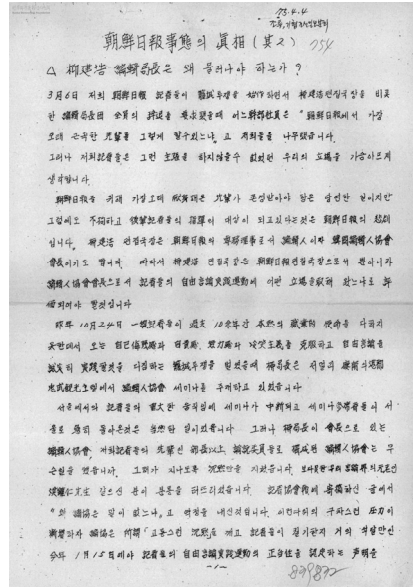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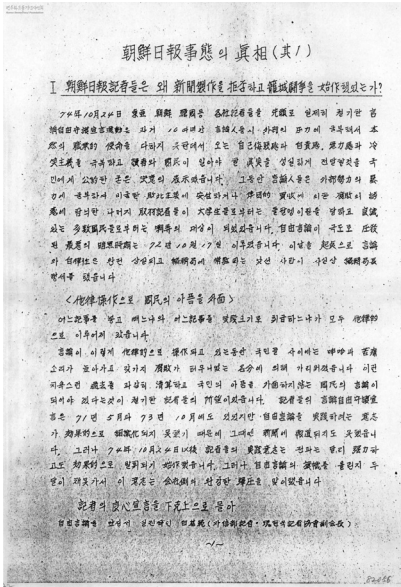
해직된 투위 기자들의 활동은 주로 두 가지에 집중되었다. 하나는 사이비 언론 조선일보의 거짓과 만행을 사회에 고발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갑작스럽게 맞은 생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언론 자유 수호 투쟁에 나선 기자들은 아무런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거리로 내쫓겼으므로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게 되었다. 당시 우리 사회엔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지식인, 종교인, 학생들도 적지 않았고, 비참한 노동 현실을 견딜 수 없어 노동운동을 하다가 투옥되거나 회사에서 쫓겨나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 감히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맞은 실업 상태는 시련이었다. 당시 해직된 기자들은 박정희 정권에 맞서다가 쫓겨난 반정부적인 ‘불온한 사람들’로 알려져 ‘기피 인물(忌避人物)’이 되어 있었으므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이들을 채용했다가는 어떤 피해를 입는지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장을 얻기까지 꽤 오랜 동안 생활고를 겪어야 했다.

이런 실업 상태는 동아투위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동아투위는 해직된 기자들이 113명에 달했으므로 그들의 사연은 더 많았을 것이다. 조선투위 2주년을 맞아 동아투위의 권영자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글을 「조선투위 소식지」에 보내왔다.

그 봄 태평로 거리에 붙어 닦친 난데없는 살기와 절규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데 지구는 벌써 해를 두 바퀴나 돌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겪어야 하는 뼈아픈 고통은 왜 없었겠으며, 음으로 양으로 엄습해 오는 신변상의 위협인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 모진 시련과 역경의 나날들을 무던히도 잘 견디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를 보고 ‘철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확신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별난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우리 이웃들의 고통에 견주어볼 때 너무나 하찮은 것이어서 우리가 감히 이 시대가 만든 고행자의 대열에 끼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조그만 고통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누군가 꼭 한 번은 저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떠맡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투위는 그런 가운데서도 외롭지 않았다. 민주회복국민회의,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개신교 민주화운동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목요기

1975년 조선투위에서 발행한 '조선일보사태의 진상' 1, 2회 각 첫 페이지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도회, 문인들의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 여러 재야운동 단체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명동 성당에서 해직 기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여러 차례 열어 기자들을 격려해 주고 조선·동아의 경영주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한국의 비참한 언론 현실을 고발했다.

초기 조선투위의 활동은 기자들의 자유언론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런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선일보 경영주가 어떻게 사악하게 기자들을 박해했는가를 알리는 데 집중되었다. 그래서 '조선일보사태의 진

상'이라는 유인물을 시리즈로 만들어 배포했다. 이 시리즈는 5회까지 계속되었다. 이 유인물은 박정희 정권이 등장한 이래 언론을 어떻게 통제해 왔으며, 언론사의 사주와 편집 간부들이 어떻게 여기에 굴복하고 권력과 야합해 왔는가를 집약적으로 다룬 짤막한 '한국언론 탄압사'나 다름없었다. 주로 여러 신문사 기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민주화운동 및 인권운동단체들에 배포했다. 기자들에게 많이 배포한 것은 독재 권력에 가위눌린 기자들의 의식, 안일하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의식에 자극을 주고 일깨워 보려고 한 것이었다. 당시의 신문들은 1975년 봄 광화문과 태평로의 두 신문사에서 약 150명에 이르는 기자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신문에 이를 보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은 권력에 저항하기는커녕 권력에 굴복하고 야합하여 권력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권력의 일부로 편입되어 그 홍보 수단이 되었으며, 마침내 그 권력을 함께 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언론을 보면서 우리가 붙여준 이름이 '제도 언론'이었다. 제도권에 편입된 언론이란 뜻이다. 이런 언론 현실을 보면서 조선투위는 언론의 자유가 나라의 민주화와 긴밀히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 언론의 자유를 획득하려면 나라가 민주화되어야 하며, 민주화가 이루어지려면 언론의 자유가 확보돼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즉 언론의 자유와 민주화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자유언론운동을 벌이면서도 자연스럽게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드러난 조선일보의 정체

조선투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뜻에서 1975년 7월 7일 사회정의의 마지막 수호 기관이라는 사법부에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냈다. 당시의 사법부가 정권에 완전히 장악되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조선일보 사태를 사법부가 어떻게 판결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다. 투위를 대표하여 이종구 기자 외 5명의 이름으로 소송을 냈는데, 이돈명 변호사와 조준희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아주었다. 두 변호사는 당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였다. 당시엔 몇 분 되지 않는 인권 변호사들이 그 많은 시국 사건을 맡아 양심수들을 구하기 위해 감옥과 법정을 뛰어다니고 있을 때였다. 두 변호사는 당시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조선일보의 간부들을 법정으로 불러내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들을 당황케 하고 질타했다. 50페이지가 넘는 장문의 준비서면을 통해 언론의 책임을 저버린 조선일보와 한국의 언론을 고발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장, 황선당 부장판사)에서도, 2심(재판장 김달식, 주심 조윤, 배심 남용희 판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은 문제의 핵심인 언론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기자들이 신문 제작 거부 농성을 하고 위계질서를 위반하여 정당한 해고 처분의 사유를 범했다는 것이었다. 2심 판결은 기자들의 행위 동기가 비록 인정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고용계약상의 노무 제공을 거부하며 기업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 것은 고용계약을 위반하는 위

법행위이며, 집단행동은 적법한 노동쟁의의 형식과 절차를 떠나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기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즉 1, 2심 판결 모두 기자들이 꺾이지 않을 수 없었던 언론 상황, 즉 권력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무참하게 침해당했는가 하는 사실, 신문 발행인과 간부들이 권력 앞에 비굴하게 굴복하고 부패 타락하여 사실과 진실을 묵살한 행위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런 언론의 빈사 상태에서 언론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기자들의 꺾기 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감아버렸다. 이에 투위는 8,000 자가 넘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기자들 행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결 또한 패소였다.

이 재판에는 기자들을 대량 파면했을 당시 징계위원장이었으며 편집국장이었던 유건호(조선일보 전무 겸 한국편집인협회 회장)가 증인으로 불려나와 증언했는데, 기자들은 그의 법정 진술을 듣고 절망했다. “아, 저런 사람이 조선일보의 편집을 맡고 한국편집인협회의 책임자였다니!” 하는 것이 기자들의 반응이었다. 증언대에서 두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답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문〉 바람직한 언론 자유의 핵심은 무엇이라 보는가? 사실과 진실의 보도기능을 극대화하고 신문의 공기성(公器性)을 확보하는 것 아닌가?

〈답〉 그렇다.

〈문〉 보도와 논평이 바르고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닌가?

〈답〉 물론이다.

〈문〉 외부 인사의 기고문은 어떻게 취급하는가? 무조건 받아들이는가, 취사 선택하는가?

〈답〉 취사선택한다.

〈문〉 조선일보사 사시 중 불편부당이란 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말인가?

〈답〉 그렇다.

〈문〉 전재구 씨(유정희 국회의원으로 유신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글을 조선일보에 실어 문제가 된 사람. 이 글의 게재에 항의했다가 두 기자가 파면당했다)의 기고문은 어떻게 실리게 된 것인가? … 전 씨의 기고문 내용은 당시 사회적 쟁점이었던 유신 체제를 일방적으로 옹호한 것 아닌가?

〈답〉 안보를 위해 유신 체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 당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찬반양론이 비등하고 있을 때였는데, 전 씨의 이 같은 기고문을 일방적으로 게재한 것이 신문의 공정성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

〈답〉 … 안보를 위해 유신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는가? 유신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증언 외에도 조선일보 주필 선우휘는 항소심 공판에서 “언론이 공적 책무를 포기한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기자는 오직 신문사 사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여 조선일보가 얼마나 무책임한 언론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는가를 드러냈다.

민주 민족 언론 선언

해직당한 뒤에도 기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전히 ‘자유 언론’에 집중되어 있었다.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하여 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며 싸우다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투위 기자들의 시야는 점점 넓어져 우리 언론이 앞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자유 언론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동아투위와 함께 1977년 12월 30일 발표한 것이 ‘민주 민족 언론 선언’이었다. 태화관에서 민주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년 반의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동아투위의 이부영, 성유보 위원의 출옥을 환영하는 자리에서였다. 아래의 글은 그 선언의 일부이다.

민중에게 자유를, 민족에게 통일을 — 이것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우리시대의 요청이며,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방향이다. ... 나라와 민족이 두 조각으로 갈라진 이래 나라 밖의 정세가 지금처럼 민족이 다시 결합하는 데 유리한 때가 없었다. ... 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고선이며 최대의 정치과제다. ... 우리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는 이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자유언론은 바로 민주언론, 민족언론임을 선언한다. ... 지난 3년여의 인고 속에서 과거의 언론인이 아닌 미래의 언론인으로 성장한 우리는 오늘의 사이비언론을 타도하고 민주 민족 언론을 세우는 역사적 책무를 통감한다.

...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외치다가 감옥에 끌려가

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배움터를 박탈당한 것을 목격하며, 또한 소위 경제성장의 응달에서 병들고 찌들린 무수한 사람들의 신음과 절규를 듣는다. 민주언론은 이러한 민중의 아픔을 같이 하는,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것이어야 한다.

이 선언이 있는 뒤 조선투위는 오랜 모색과 토론 과정을 거쳐 한국의 언론이 지향해야 할 이념을 자유 언론, 민주 언론, 민족 언론, 민중 언론으로 정했다.

조선일보를 넘어 제도 언론에 대한 투쟁으로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 이후 1976년 3월 1일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 등 10명이 명동성당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발표한 ‘3·1 민주 구국 선언’ 사건이 있는 후 민주 인사들과 종교인, 지식인,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은 더욱 세차게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고 1977년 1월의 함평 고구마 사건, 1978년 2월의 동일방직노조 사건에서 보듯이 민생 현장에서도 생존권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외치는 어떤 집회에서도, 인권 회복을 요구하는 어떤 기도회에서도,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 현장에서도 기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대신 모든 신문과 방송이 유신 체제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독재 권력의 충실한 홍보기구로 전락해 있었다.

이를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조선투위는 1978년 5

월 17일 '제도 언론 안에 있는 동료들에게' 보내는 장문의 공개서한을 「조선투위소식」에 실어 배포했다.

지금 당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둡고 아픈 곳, 이 땅 민중들이 울부짖는 어느 현장에서도 우리는 당신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이 농협의 재배 권유와 수매 약속을 믿고 심어 거둬들인 고구마를 산더미처럼 썩혀 버려야 했을 때, 더 이상 참을 길 없어 벌인 호남 농민들의 시위와 단식 현장에도 당신들은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노동조합의 선거에 참여하려는 동일방직의 어린 여공들에게 똥물을 먹이고 뿌린 천인(天人)이 함께 분노할 그 만행의 현장에 마저 당신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수많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축출되어 설 자리를 거부당하고 있으며, 수많은 지식인과 양심적인 사람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웃을 수도 없는 재판들이 주일마다 법정이 터지게 메워진 방청객들 속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민중의 현장에 당신들은 열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현실을 보면서 조선투위는 1978년 10·24 자유 언론 실천 선언 4주년을 맞아 투위의 투쟁 대상이 조선일보를 포함한 한국 전체의 제도 언론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발행한 「조선투위소식」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는 언론의 자유는 이제 자유가 아니라 속박의 수

단이 되었으며, 진실을 알려야 할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되었다. 새가 죽으면 뉴스가 되어도 사람이 죽으면 뉴스가 되지 않는다는 동일방직 근로자들의 절규가 말해주듯이 생존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인권은 새(鳥)권(權) 앞에서 여지없이 묵살당하고 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중의 외침은 권력의 소리만 요란하게 장식되고 있는 신문의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 오늘의 언론은 권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통치의 한 기능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가장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이야말로 오늘의 언론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다.

박정희의 죽음과 또다른 독재정권의 등장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가 사망하자 그토록 잔인하게 국민들을 억압해 오던 유신 체제도 끝났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독재 체제가 어서 끝나기를 갈망해 온 국민들은 이제야말로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조선투위도 마찬가지였다. 오랜 동안 염원해 왔던 원상회복도 이루어져 새롭게 태어난 언론인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 는 역사적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1980년 초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을 논의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언론자유의 문제가 빠짐없이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선투위는 1980년 2월 ‘누가 자유 언론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투위는 “언론이 새 시대의 새 역사에

뭣뭣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거의 언론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극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조선·동아 양 투위 기자들을 원상회복시키지 않는 한 두 신문사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자유 언론과 민족지를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자가당착을 모면할 길이 없을 것이며, 민중과 독자들의 빈축과 불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도 1980년 2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날 억압체제 아래에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사람들이 석방되고, 학교에서 추방되었던 학생과 교수가 학원으로 돌아가고 있건만 조선·동아 기자들이 다시 언론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직 기자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들과 해직 언론인들의 이런 꿈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다. 그들은 해직 기자들을 복귀시키기는커녕 ‘언론 정화 작업’이란 이름으로 언론인 1,000여 명을 강제 해직시키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금지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해직된 기자들이 만든 단체가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다.

그런데 전두환의 신군부에 맞서 광주시민들이 펼친 5·18 광주민주항쟁 때 조선일보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신문은 시위에 나선 광주시민들을 ‘폭도’라고 매도하면서 ‘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하여 광주시민들을 두 번 죽였다. 조선일보의 광주 르포 ‘무정부상태 광주 1주’는 광주항쟁에 대한 왜곡보도의 결정판이었다. 그 뒤 광주학살의 수괴 전두환이 전역했을 때는 전두환에 대해 “비리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품과 책임감, 그러면서도 아래 사람에게는 한 없이 자상한 오늘의 지도 자적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찬양했다. 그리고 '새 시대 개막과 새 정치' 라는 좌담기사에서는 "가장 잘 훈련, 조직된 군부 엘리트, 도덕성·성실성 높고 진취력 강한"정치지도자라고 전두환을 치켜세웠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광주항쟁 전날인 5월 17일부터 조선투위 위원장 정태기를 체포하려는 작전에 들어갔다. 1975년 초부터 기자협회 조선일보 분회장이 되어 언론자유수호투쟁을 이끌어오고, 5년 동안 조선투위 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것이 저들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다. 그는 1979년 11월 14일 조선투위 대표로 해직교수협의회, 동아투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등 5개 단체와 함께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종로서에 연행된 바 있었고, 11월 25일엔 YWCA에서 가진 '통대(統代)저지 국민대회 사건'과 관련해 중부서에 연행된 바 있었다. 신군부는 그의 이런 활동에 더하여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그를 엮어 넣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정태기는 수배를 받고 오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 악명 높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으며,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4개월 만에 풀려났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창립과 활동에 적극 참여

조선투위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약칭 '언협')의 창립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언협은 1984년 12월 19일 서울 장충동에 있는 베네딕토수도원 피정의 집에서 창립되었다. 이 단체는 조선, 동아 투위와 80년해직

언론인협의회(이하 80년해직), 그리고 뜻있는 출판인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각 단체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되 함께 힘을 합쳐 활동하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창립 당시의 임원은 의장에 송건호, 공동의장에 김인한(동아투위 위원장), 최장학(조선투위 2대 위원장), 김태홍(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출판인 김승균, 실행위원에 동아투위 윤활식, 이부영, 조선투위 신흥범,성한표, 80년해직 노향기, 박우정, 출판인 이호웅, 김도연, 감사에 80년해직 이경일, 출판인 나병식, 사무국장에 성유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출판인들은 그 후 출판운동 조직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협은 세 해직 언론인 단체들로만 운영되었다.

언협은 1985년 6월 15일 「말」 창간호를 내놓았다. '민족, 민주, 민중 언론의 디딤돌'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왔다. 등록되지 않은 '비합법 매체'였다. 「말」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창간호는 서점에 깔린 지 하루 만에 재판에 들어갔다. 「말」은 창간호부터 8,000부를 찍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베스트셀러였다. 「말」이 이처럼 큰 반응을 일으킨 것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제도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은 뉴스들을 '객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제도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는 뉴스들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갈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직된 기자들이 만드는 매체라는 것이 독자들에게 신뢰를 주었을 것이다.

「말」이 이처럼 큰 반향을 일으키자 권력 당국은 이를 가만 두고 보지 않았다. 그들은 걸핏하면 서점에 들이닥쳐 이 잡지를 압수해 가고 팔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그리고 편집인을 잡아다가 10일 이상의 구류를 살게 했다. 그래서 성유보 사무국장을 비롯한 언협의 간부들 여럿이 구류를 살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낸 「말」 창간호(1985.6.15)와 보도지침의 실체를 폭로한 특집호(1986.9)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왔다. 최장학, 신흥범도 그러했다.

언협은 1986년 9월 「말」 특집호를 통해 ‘보도지침’의 실체를 폭로하여 나라 안팎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보도지침은 전두환 정권이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을 통해 매일 매일 언론사들에 내려 보낸 보도 통제 가이드라인이다. 정권이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적은 없었다. 언협은 바로 그 증거를 확보해 세상에 폭로했다. 모두 688건의 사례를 공개한 것인데, 국민들은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야만적으로 언론을 통제해 왔는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알게 되자 경

보도지침을 폭로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언협외 김태홍 사무국장과 신흥범 실행위원(필자)에게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송건호 의장. 사진 왼쪽부터 정태기 조선투위 전 위원장, 신흥범, 송건호 선생, 리영희 선생, 김태홍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987.6.3. © 박용수)

악했다. 전두환 정권이 정치적,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사건으로 언협 사무국장 김태홍(80년해직)과 자료를 제공한 한국일보 기자 김주연, 그리고 언협 실행위원 신흥범(조선투위)이 1986년 12월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잡혀가 조사를 받고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들은 1987년 6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한겨레신문의 창간

해직 기자들에게 새 언론을 만드는 것, 새 신문을 창간하는 것은 오랜 꿈이었다. 펜을 빼앗긴 채 언론과는 거리가 먼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다시 언론계로 돌아가 신문다운 신문을 만들어보는 꿈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새 언론이 지향해야 할 이념도 소중하게 가꾸어놓고 있었다.

1985년 3월 5일 조선투위는 투위 발족 10주년을 맞아 해직 언론인들의 오랜 소망을 선언문에 담아 발표했다. 제목은 ‘새 언론의 창설을 제안한다’였다. 이 선언문에서 투위는 이렇게 말했다.

일찍이 우리는 민중이 주체가 된 진정한 언론을 가져본 일이 없다. 조선·동아일보라는 것도 3·1 민족해방투쟁에서 이 땅의 민중이 보인 불굴의 항일자세를 무마하기 위해 일제가 시행한 이른바 문화정책의 소산일 뿐 민중이 주체적으로 건설한 자생 언론은 아니었다.

민중이 주체가 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조선·동아 양 투위의 10주년에 즈음하여 제도 언론을 대신할 민중적 열망의 표현 수단인 새로운 자유, 민주, 민중, 민생, 민족 언론기관을 창설하자고 제안한다. 우리는 그 제도적 법적 준비의 일환으로 민중 언론을 설립하기 위한 무기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창한다. 끝으로 우리는 지난 연말에 발족시킨 민주언론운동협의회와의 굳건한 연대를 다짐한다. 이 연합이 새롭게 탄생하는 언론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밝힌다.

이런 구상은 1985년 6월 15일에 나온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기관지 「말」 창간호에서도 똑같이 제시되었다. 「말」은 ‘제언’ 난에서 “우리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민중 언론 시대’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언론기관의 창설을 제안한다. 새로운 언론기관은 한 마디로 민중의 현실과 의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창설하는 언론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새로운 언론기관은 개인 또는 소수의 언론기업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민주 언론을 갈망하는 모든 민중들이 스스로 출자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표현 기관을 창설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움직이는 민중의 표현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새 신문에 대한 구상은 이에 앞서 1979년 가을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던 동아투위 위원장 안종필에 의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었다.

그런데 해직 언론인들의 머릿속에만 있던 이런 구상을 현실로 만들어 보려고 적극적으로 맨 먼저 나선 것이 전 조선투위 위원장 정태기였다. 그는 조선일보 기자를 거쳐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임재경, 동아투위 위원장 이병주, 그리고 언론인이자 해직 교수인 리영희와 만나 이 아이디어를 논의했고, 그 후 언협의 송건호 의장을 만나 창간 작업에 나서줄 것을 부탁했다.

송 의장은 이 문제를 동아·조선투위, 언협과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그해 7월 중순 언협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그 뒤 정태기, 이병주, 김태홍이 중심이 되어 ‘새 언론 창설 연구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써 새 언론 창간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0월 새 신문 창간 발기인 대회

가 열린 후 11월부터 모금운동에 들어갔는데, 목표는 50억 원이었다. 많은 어려움을 넘어 1988년 2월에 목표액 50억 원이 모아져 1988년 5월 15일 마침내 한겨레신문이 탄생했다. 한겨레신문은 6월항쟁의 최대 성과였고, 민주 진영이 이룩한 보기 드문 쾌거였다. 이 신문의 창간엔 조선투위에서 정태기 외에 김선주, 성한표, 신흥범, 오성호, 이창화가 참여했다.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운동

조선투위는 해직된 후 45년 동안 조선일보를 지켜보아 왔다. 이 신문이 사실과 진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감시해 왔다. 그러나 지난 45년 동안 조선일보는 나쁜 언론이라는 점에서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언론의 가장 큰 책임은 ‘사실’과 ‘진실’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인데, 이 신문은 공정성과 균형을 잃고 뉴스를 아주 편파적, ‘정파적’으로 다루어 언론을 ‘프로파간다’ 수준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오래 전부터 들어왔다.

조선일보는 이제까지 자신들이 저질러온 과거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었다. 일제 강점기엔 일본 천황을 찬양하고 일제에 부역하면서 일본 식민지주의자들이 나누어준 특권을 누렸고,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때에는 독재 정권에 투항, 그 권력의 일부가 되어 특권을 누렸다. 국민들이 피 흘려 싸워 얻어낸 언론의 자유를 안겨주자 이제는 그 자유를 공짜로 얻어 누리며 스스로 ‘권력’이 되었다. 가장 큰 권력의 하나가 되었는데도 더 큰 권력을 추구해 왔다. 이 신문은 자신을 ‘정치권력을 만들어내는 권력’으로까지 여기고 있다. 어떤 정권이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너뜨릴 수 있으며, 얼마든지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조선일보의 친일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어 2019년 7월엔 이 신문의 민족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 신문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가까운 공격을 한국 정부에 가했다. 일본이 이 문제를 계기로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자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느냐”라는 제목을 단 일본어판 신문을 만들었다. 이를 묵과할 수 없었던 조선투위는 2020년 8월 1일 동아투위, 자유언론실천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회원들과 함께 조선일보 앞에서 ‘조선일보의 반민족 친일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신문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2020년 3월 5일과 4월 1일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창간 100년을 맞는 해였다. 이런 해를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거짓과 배신으로 그 무거운 범죄를 짓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두 신문의 죄상을 국민들 앞에 밝혀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두 신문은 오래 전부터 그 반민족성, 반민주성, 반민중적 행위 때문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오던 터였다. 그래서 2020년 1월 결성된 것이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이었다. 이 모임엔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투위,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 주권자전국회의, 조선투위 등 언론운동 단체들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30여 개의 시민운동 단체들이 참여했다.

‘시민행동’은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최악보도 100선』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만들어 여러 언론사와 시민운동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앞에서 약 100일에 걸쳐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조선·동아 창간기념일엔 두 신문사 앞에서 이들의 반민족, 반민주 부역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한국의 언론이 바로 서려면 이들 언론의 과거를 청산하고 온 국민과 시민들이 이 사이버 언론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544~~